

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21년 9월 15일 기사입니다.

[2021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접경지 강점·관광자원 활용해 균형발전·북방진출 발판 마련



동해고속도로 고성 북부까지 연장
북부선-동서고속철 직결노선 연결
금강산관광 재개·북극해 진출 대비
지역 특화 관광거점 구축 협력 필요</p>

동해안에는 긴 해안선과 함께 태백산맥 등 지역적으로 넓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수많은 문화유산이 있다. 특히, 고성군은 북한과 접해있어 군사규제로 인해 지난 70년간 잘 보존된 생태자원과 개발 가능한 토지가 풍부하며 한반도 허리에 위치해 있어 남북교류 및 북방경제시대의 전초기지로 최적지다.

이러한 육상과 해상에 걸쳐진 동해안의 천혜자원과 접경지 고성의 지리적·상징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세계 속의 신동해안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 본다.

이를 위해 첫째, 북방경제 시대의 교두보로서 동해선을 중심으로 한 핵심 교통망과 배후 인프라를 건설해야 한다. 우선 속초에서 단절된 남북 7축 평화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를 고성 북부까지 연장하는 한편, 착공이 예정된 동해북부선 철도와 동서고속화 철도 간 직결노선을 연결해 동해 북부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향후 남북경협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북방물류 루트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유라시아 및 북극해 진출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물류단지과 거점복합항만을 동해북부선 철도와 연계해 대단위로 조성해야 한다.

둘째, DMZ를 세계 평화·협력의 상징공간으로 활용해 각종 국제평화 및 외교 관련 회의를 유치하고, 세계적 수준의 평화교육 및 역사 체험지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잘 보존된 생태자원을 활용해 힐링과 휴양 등을 연계한 생태기반 관광 프로그램 개발, 생태길 탐방 둘레길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산림자원 보호·육성과 남북간 산림 분야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 평화통일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남북산림협력센터를 파주에 이어 고성지역에도 건립해야 한다.

셋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해제) 및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은 남북교류 및 북방경제의 관문으로 동해안권의 세계화 실현에 핵심적 위치에 있으나 각종 군사규제가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그간 고성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은 국가안보란 이유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희생을 강요받아 왔

으며, 각종 투자 및 개발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 균형발전과 북방 진출의 거점이 되려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해제)는 물론 각종 개발사업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담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실질적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동해안권을 세계적인 동북아 휴양관광지로 조성해야 한다. 국제적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설악산, 금강산 등의 산악자원, 해수욕장 어촌 어항 등의 해양자원, 접경지 DMZ 평화생태자원, 동해안에 산재한 각종 문화자원 등을 하나로 연계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해안 시·군별로 특화된 관광자원을 기초로 관광거점을 형성하고 네트워크 기능을 부여해 지역별 관광거점이 벨트화되는 관광체계 구축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동해안 6개 시·군이 각개약진식의 관광개발 전략을 벗어나 공통인수를 찾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내야 한다. 그래야 깨끗한 공기와 푸른 바다 등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동해안 관광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권과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한 L자형 국토개발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동해안권은 낙후돼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북방경제 연계 추진을 위해 그려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중 금강산 원산 단천 청진 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환동해 경제벨트',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지구 조성 및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접경지역 경제벨트'의 개발구상을 가시화해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세계로 뻗어 가는 동해안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환동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경제벨트'의 개발구상 결절점에 있는 고성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강원도 및 동해안권 6개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정리=권원근기자